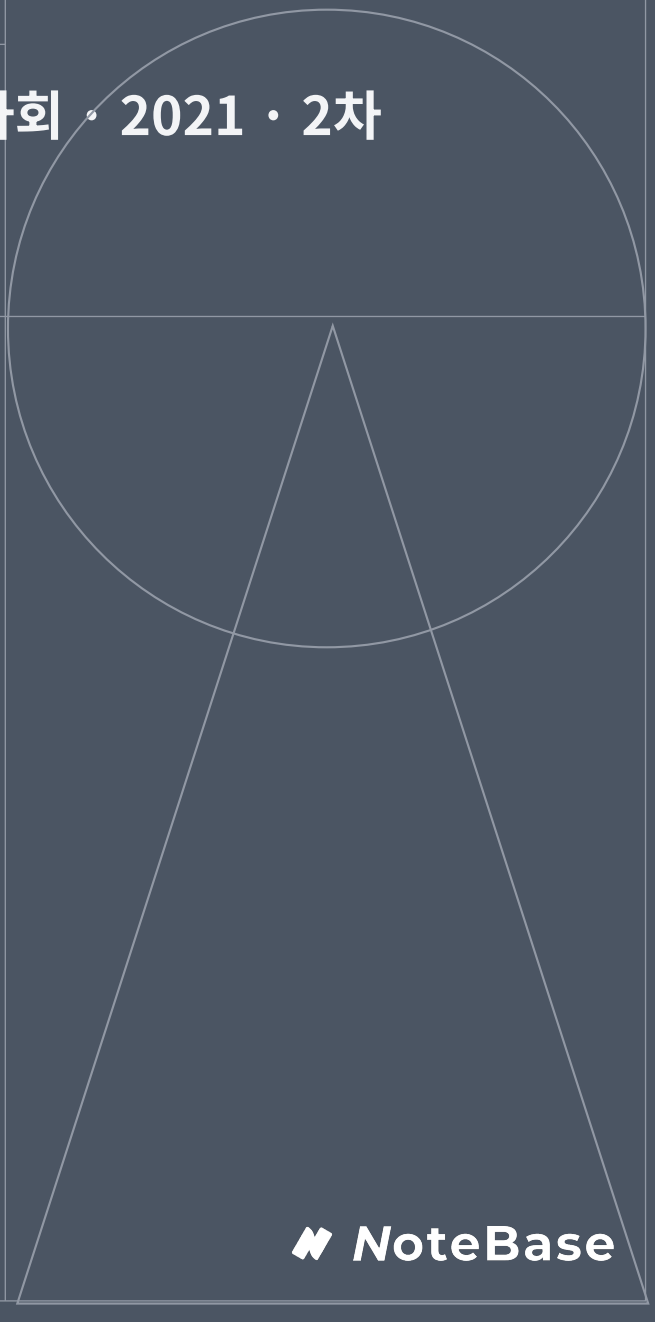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1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1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1 · 2차

문 1. 다음 평등선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등선거에 대비되는 선거 원칙이다.

②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1표를 행사한다.

③ 인구편차를 감안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 사회적 신분·인종·재산 등에 따라 선거 참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평등선거와 보통선거를 구별하고,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같은 수의 표를 주고 각 표의 가치도 동등하게 보장하는 원칙이다. 차등선거와 대비되며,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져 표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통선거는 사회적 신분·인종·재산·성별·교육 정도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른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평등선거는 '표의 수와 가치', 보통선거는 '선거권자의 자격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차등선거는 신분이나 재산 등에 따라 투표권의 수나 가치를 달리하는 방식이므로, 평등선거와 대비된다.
② O —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1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평등선거의 핵심 내용이다.
③ O —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같은 1표라도 당선 결과에 미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④ X — '사회적 신분·인종·재산 등에 따라 선거 참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평등선거가 아니라 보통선거의 원칙을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평등선거에서 모든 유권자의 표는 수와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말 때문에 평등선거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참여 자격의 차별 금지는 보통선거이고, 평등선거의 판단 기준은 표의 수와 가치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재산·신분 등 선거권의 자격 제한을 말하면 보통선거, 1인 1표와 투표 가치 또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말하면 평등선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통선거는 '누가 투표하는가', 평등선거는 '표가 얼마나 동등한가'이다.

NoteBase

문 2. 다음 갑, 을, 병은 홉스, 로크, 루소 중 한 명에 관한 설명에 해당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악하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을: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하며,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상태이다.
병: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고,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재판관이 없으며, 법을 집행하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어서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① 갑은 국가에 이양된 권리는 개인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을은 국가는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계약에 따라 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병은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부당한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④ 갑, 을, 병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구성된다고 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자연 상태와 인간 본성에 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갑·을·병을 홉스·루소·로크와 연결하고, 각 사상가의 사회계약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갑은 홉스이다. 홉스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설명했으며, 질서와 안전을 위해 개인들이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한다고 보았다.
을은 루소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선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보았으며,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일반의지가 주권의 기초라고 보았다. 이 주권은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
병은 로크이다. 로크는 인간의 정신을 백지와 같다고 보았고, 자연 상태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갑인 홉스는 자연 상태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 개인들이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한다고 보았으며, 일단 성립한 주권에 대하여 개인이 그 권리를 임의로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X — 을인 루소에게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계약에 따라 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이다.
③ O — 병인 로크는 정부가 신탁을 어기고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하면 국민이 그 정부에 저항하거나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O — 홉스·로크·루소는 구체적인 계약 방식과 주권의 성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신의 뜻이 아니라 개인들의 동의와 사회계약에서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루소가 사회계약을 주장했다는 사실만 보고 ②의 '계약에 따라 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까지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루소의 주권은 일반 의지에 속하며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인의 투쟁'은 홉스, '성선설·일반 의지·주권 양도 불가'는 루소, '백지 상태·재산권·저항권'은 로크로 연결한다. 인물을 확인한 뒤 주권과 저항권에 관한 고유한 주장을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홉스는 권리 양도와 강한 주권, 로크는 자연권과 저항권, 루소는 일반 의지와 주권 양도 불가이다.

NoteBase

문 3.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9인의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인사청문, 임기와 임명 절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임명권자와 선출·지명 주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연임 = 임기가 끝난 뒤 다시 같은 직위에 임명되어 계속 재직하는 것이다.
선출·지명 = 재판관이 될 사람을 정하는 절차이고, 임명 = 그 사람에게 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핵심 구분

㉠ O: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O: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된다.
㉢ X: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중임할 수 없다'이고, 올바른 표현은 '연임할 수 있다'이다.
㉣ X: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틀린 표현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부분이고, 올바른 표현은 국회는 3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3인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9인 모두를 임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은 ㉠, ㉡의 2개이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 제112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적절한 설명은 1개가 아니라 ㉠, ㉡의 2개이다. 틀린 표현: '1개' → 올바른 표현: '2개'이다.
② O — ㉠과 ㉡이 적절하고 ㉢과 ㉣이 부적절하므로 모두 2개이다.
③ X — 적절한 설명은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틀린 표현: '3개' → 올바른 표현: '2개'이다.
④ X — 적절한 설명은 4개가 아니라 2개이다. 틀린 표현: '4개' → 올바른 표현: '2개'이다.

오답 포인트

㉢의 '중임할 수 없다'를 대법원장의 임기 규정과 혼동하거나, ㉣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을 임명권자로 오해하기 쉽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고, 국회는 선출, 대법원장은 지명, 대통령은 임명을 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헌법기관의 구성 문제에서는 자격과 인원, 임기와 연임 가능 여부, 선출·지명·임명의 주체를 각각 분리해 판단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법관 자격 9인, 임기 6년·연임 가능, 대통령이 전원 임명'의 순서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헌법재판관은 법관 자격 9인, 임기 6년·연임 가능, 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전원 임명한다.

NoteBase

문 4. 다음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

② 평등권은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있다.

③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국민투표권이 있다.

④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재판청구권이 있다.

정답 4번

쟁점

기본권을 자유권·평등권·참정권·청구권으로 구분하고, 각 기본권의 성격과 대표 사례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청구권이 독립된 생활 이익 자체를 보장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나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핵심 구분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고,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청구권은 국가의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적극적 성격이 있지만,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거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현행 헌법은 법 앞의 평등, 신체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민투표 제도를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며, 신체의 자유는 대표적인 자유권이다.

② O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교육에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평등 원리가 구체화된 예이다.

③ O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이며, 국민투표권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④ X
청구권에는 재판청구권과 같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나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실체적 권리'라는 표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이다.
올바른 표현: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오답 포인트

④에서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부분만 보고 청구권 전체를 실체적 권리로 판단하기 쉽다. 국가의 행위를 요구한다는 적극성과, 권리의 성격이 수단적·절차적이라는 점은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권의 성격과 사례를 따로 확인한다. 국가의 간섭 배제는 자유권, 차별 배제는 평등권, 정치 참여는 참정권, 국가에 구제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성격을 물으면 '적극적 요구'와 함께 '수단적·절차적 권리'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자유권은 방어, 평등권은 차별 배제, 참정권은 참여, 청구권은 구제를 위한 수단이다.

NoteBase

문 5. 현행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 감사원
㉡ 금융감독원
㉢ 국무회의
㉣ 경찰청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현행 헌법이 기관의 명칭을 직접 규정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과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헌법에 명시된 기관은 헌법 조문에 그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가 직접 나타나는 기관이다. 다른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구분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헌법 제97조는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경찰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설치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에 명시된 기관은 ㉠ 감사원과 ㉢ 국무회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 금융감독원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므로 둘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

② O
㉠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다.

③ X
㉠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 경찰청은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둔 기관이므로 둘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

④ X
㉢ 국무회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 금융감독원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 감사원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

오답 포인트

국가기관으로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과 헌법에 기관명이 직접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 금융감독원과 ㉣ 경찰청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 문제의 기준은 기관의 중요성이 아니라 헌법 조문에 명칭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관별 설치 근거의 법적 단계부터 확인한다. 헌법 조문에 기관명이 직접 나오면 헌법기관으로 판단하고, 개별 법률에만 설치 근거가 있으면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감사원·국무회의는 헌법, 금융감독원·경찰청은 법률이다.

NoteBase

문 6. 다음 부동산 등기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별도의 서류를 초본이라고 한다.

②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③ 갑구에는 소유권 변경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④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부동산 등기부의 증명서 명칭과 표제부·갑구·을구에 기록되는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등기부 =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이다.
등본과 초본 = 전통적인 구분에서 등본은 원본의 전부를 옮긴 서류이고, 초본은 원본의 일부를 옮긴 서류이다.
현행 부동산 등기 실무에서는 각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핵심 구분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따라서 등기부 전체 내용을 옮긴 서류를 초본이라고 한 ①은 전부와 일부의 명칭을 뒤바꾼 설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등기부의 내용을 전부 그대로 옮긴 서류는 등본에 해당하며, 현행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초본은 원본 내용 중 일부를 옮긴 서류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별도의 서류를 초본이라고 한다.
올바른 표현: 등기부의 내용을 전부 그대로 옮긴 서류는 등본이라고 하며, 현행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② O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 자체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등을, 건물은 소재지번·건물명칭·건물번호·건물내역 등을 기록하므로 소재지, 용도, 구조 등에 관한 설명은 적절하다.

③ O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소유권의 보존·이전과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가압류·말소 등 소유권 관련 변동을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적절하다.

④ O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변경·말소 등을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이라는 표현과 '초본'을 결합한 데 있다. 전부를 옮기면 등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일부만 옮기면 초본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전부와 일부를 구별한 뒤 등기부의 세 구역을 '표제부는 부동산 자체,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대응시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부는 등본, 일부는 초본이다. 표제부는 표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어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②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③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의 기본 개념과 임차인 보호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임차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이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이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3조의2가 이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주택을 빌려 사용·수익하게 한다는 설명은 주택임대차의 기본 내용에 부합한다.

② X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을 마치면 취득하는 것은 대항력이다. 이 요건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올바른 표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③ O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로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한다.

④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약정한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의 효과를 우선변제권으로 바꿔 놓은 데 있다. 두 요건은 대항력을 발생시키며,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차인 보호 요건을 묻는 경우 '인도＋주민등록은 대항력',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으로 구분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인도＋전입은 대항력,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다.

NoteBase

문 8. 다음은 A국과 B국의 총노동량과 두 재화에 관한 노동소요량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양국의 재화 생산에서 노동만이 사용되며,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소요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A국	B국
총노동량	1,000	600
X재 1개 생산의 노동소요량	2	3
Y재 1개 생산의 노동소요량	4	2

① A국에서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frac{1}{2}$개다.

② B국에는 효율적이나 A국에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존재한다.

③ 무역 발생시 B국은 X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한다.

④ 세계시장에서 X재의 상대가격이 Y재의 $\frac{1}{3}$이면 A국은 Y재 대신 X재를 생산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단위당 노동소요량으로 생산가능량과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 효율성·비교우위·특화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국: 총노동량 1,000, X재 1개에 노동 2, Y재 1개에 노동 4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대 생산량은 X재 500개 또는 Y재 250개이다.

B국: 총노동량 600, X재 1개에 노동 3, Y재 1개에 노동 2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대 생산량은 X재 200개 또는 Y재 300개이다.

사용할 공식

재화 1개의 기회비용은 그 재화의 단위당 노동소요량을 포기하는 재화의 단위당 노동소요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OC_A(X) = \frac{2}{4}Y = \frac{1}{2}Y, \qquad OC_A(Y) = \frac{4}{2}X = 2X$

$OC_B(X) = \frac{3}{2}Y, \qquad OC_B(Y) = \frac{2}{3}X$

노동만 투입되고 단위당 노동소요량이 일정하므로, 같은 노동으로 더 적게 포기하는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A국의 생산가능경계는 $2X + 4Y = 1000$, B국의 생산가능경계는 $3X + 2Y = 600$이다.
2. B국의 생산점 $(X, Y) = (200, 0)$은 노동 600을 모두 사용하므로 B국에는 효율적이다. A국에서는 같은 생산에 노동 400만 필요하여 노동 600이 남으므로 생산가능경계 안쪽의 비효율적인 점이다.
3.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A국이 $\frac{1}{2}Y$, B국이 $\frac{3}{2}Y$이므로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4. 세계시장에서 $P_X/P_Y = \frac{1}{3}$이면 A국의 X재 상대가격은 X재의 기회비용 $\frac{1}{2}Y$보다 낮다. A국은 X재보다 Y재를 생산하는 편이 유리하다.

선지 판단

① X —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frac{1}{2}$개'가 틀린 표현이다. A국에서 Y재 1개에는 노동 4가 들고 X재 1개에는 노동 2가 드므로, 올바르게는 Y재 1개의 기회비용이 X재 2개이다. $\frac{1}{2}Y$는 X재 1개의 기회비용이다.
② O — B국의 효율적 생산점 $(200, 0)$은 B국의 노동 600을 모두 사용하지만, A국에서는 노동 400만 사용하므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B국에는 효율적이나 A국에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실제로 존재한다.
③ X — 'B국은 X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X재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A국이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올바르게는 B국이 Y재를 수출하고 X재를 수입한다.
④ X — 'A국은 Y재 대신 X재를 생산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P_X/P_Y = \frac{1}{3}$은 A국의 X재 기회비용 $\frac{1}{2}Y$보다 낮으므로 X재 생산의 보상이 기회비용에 못 미친다. 올바르게는 A국이 X재 대신 Y재를 생산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X재 1개의 기회비용과 Y재 1개의 기회비용을 서로 뒤집은 선지이다. ③은 절대생산량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비교우위를 판단해야 한다. ④는 세계 상대가격이 국내 기회비용보다 낮을 때 그 재화를 생산한다고 반대로 판단하기 쉬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국의 생산가능경계와 재화별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효율성은 해당 국가의 생산가능경계 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무역 방향은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를 수출하는지 확인한다. 세계 상대가격이 한 재화의 국내 기회비용보다 높으면 그 재화에 특화하고, 낮으면 다른 재화에 특화한다.

암기 포인트

기회비용은 '내 노동소요량 ÷ 상대 재화 노동소요량'이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 생산 특화는 세계 상대가격이 국내 기회비용보다 높은 재화이다.

NoteBase

문 9. 다음은 A국과 B국의 지니계수를 보여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A국	0.28	0.31	0.34	0.37
B국	0.37	0.34	0.31	0.28

<보기>

㉠ 2005년에 사회구성원 간 소득 격차는 A국보다 B국이 더 컸을 것이다.

㉡ 지난 15년간 A국의 사회구성원 간 소득 격차는 감소하였다.

㉢ 2015년에 숙련근로자와 비숙련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A국보다 B국이 더 작았을 것이다.

㉣ 2020년에 마이너스 소득세*의 도입은 A국보다 B국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 마이너스 소득세는 고소득층에게 누진 과세하고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득세 제도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 같은 연도에는 두 국가의 지니계수 크기를 비교하고, 시기별 변화는 한 국가의 지니계수 증감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같은 연도의 두 국가 값을 비교하여 소득 격차의 상대적 크기를 판단한다.
2. 같은 국가의 연도별 값을 비교하여 소득 격차의 증가·감소를 판단한다.
3. 지니계수가 큰 국가일수록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연결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2005년에는 A국이 0.28, B국이 0.37이므로 B국의 소득 격차가 더 크다. A국은 2005년 0.28에서 2020년 0.37로 상승했으므로 소득 격차가 커졌다. 2015년에는 A국이 0.34, B국이 0.31이므로 숙련근로자와 비숙련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B국이 A국보다 작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A국이 0.37, B국이 0.28이므로 소득 재분배 제도의 필요성은 A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과 ㉢이다.

보기 판단

㉠ O — 2005년 B국의 지니계수 0.37은 A국의 0.28보다 크므로 B국의 사회구성원 간 소득 격차가 더 컸다고 판단한다.
㉡ X — A국의 지니계수는 지난 15년간 0.28에서 0.37로 상승하였다. 틀린 표현인 '소득 격차는 감소하였다'는 '소득 격차는 증가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 O — 2015년 A국의 지니계수 0.34는 B국의 0.31보다 크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의 한 양상인 숙련근로자와 비숙련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B국이 A국보다 작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 X — 2020년 지니계수는 A국 0.37, B국 0.28이므로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마이너스 소득세의 필요성은 A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틀린 표현인 'A국보다 B국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는 'B국보다 A국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 고른 조합이다.
②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틀린 ㉣을 옳은 ㉢으로 바꾸면 올바른 조합인 ㉠, ㉢이 된다.
③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틀린 ㉡을 옳은 ㉠로 바꾸면 올바른 조합인 ㉠, ㉢이 된다.
④ X — ㉡과 ㉣은 모두 옳지 않다. A국의 소득 격차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였으며, 2020년 소득 재분배 제도의 필요성은 B국보다 A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오답 포인트

지니계수가 더 큰 국가를 더 평등한 국가로 거꾸로 해석하거나, A국의 2005년 값과 2020년 값의 증감 방향을 반대로 읽으면 틀린다. 또한 2020년에는 A국의 지니계수가 더 크므로 재분배 필요성의 방향도 A국 쪽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니계수는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기준을 먼저 적용한다. 국가 간 비교는 같은 연도의 값으로, 추세 비교는 같은 국가의 시작 연도와 끝 연도 값으로 판단하며, 지니계수가 큰 국가일수록 소득 격차 및 재분배 필요성이 크다고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크고,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도 커진다.

NoteBase

문 10. 다음 (가), (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의 사례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의 종류와 유사한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전보다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경우
(나) 건강한 사람들보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주로 가입하여 보험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
<보기>
㉠ 대출 신청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은행이 위험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준 경우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가가 대출 신청에 제시한 계획보다 위험하게 사업을 운영한 경우
㉢ 기업정상화를 위해 국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조달받은 OO 건설사가 매출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의 100%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 판매 차량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품질이 낮은 차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① (가)-㉠㉢ (나)-㉡㉣
② (가)-㉠㉣ (나)-㉡㉢
③ (가)-㉡㉢ (나)-㉠㉣
④ (가)-㉡㉣ (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보 비대칭에서 계약 전의 역선택과 계약 후의 도덕적 해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선택: 거래 전에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유형이나 품질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여 불리한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 현상이다. 키워드는 '계약 전·숨겨진 특성'이다.
도덕적 해이: 계약 후에 상대방이 행동을 완전히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의 의무를 줄이거나 더 위험하게 행동하는 현상이다. 키워드는 '계약 후·숨겨진 행동'이다.
(가)는 보험 가입 후 사고 예방 노력을 줄였으므로 도덕적 해이이고, (나)는 보험 가입 전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주로 가입한 것이므로 역선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대출 전에 은행이 신청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역선택이고, ㉢은 자금 지원 후 기업이 방만하게 보상한 도덕적 해이이다. 따라서 '(가)-㉠㉢, (나)-㉡㉣'은 서로 다른 유형을 섞은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가)-㉡㉢, (나)-㉠㉣이다.

② X
㉠과 ㉣은 모두 거래 전에 상대방의 위험도나 상품의 품질을 알기 어려워 발생한 역선택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과 ㉢은 계약이나 지원 뒤 행동이 위험하거나 방만해진 도덕적 해이이므로 (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두 유형을 거꾸로 연결했다. 올바르게는 (가)-㉡㉢, (나)-㉠㉣이다.

③ O
(가)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사례는 대출 후 계획보다 위험하게 사업을 운영한 ㉡과 정책 자금 지원 후 성과급을 지급한 ㉢이다. (나)의 역선택과 같은 사례는 대출 전에 위험한 사업자를 가려내지 못한 ㉠과 거래 전에 차량 품질을 알지 못한 ㉣이다.

④ X
㉡은 도덕적 해이이므로 (가)에 맞지만, ㉣은 역선택이므로 (가)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은 역선택이므로 (나)에 맞지만, ㉢은 도덕적 해이이므로 (나)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가)-㉡㉢, (나)-㉠㉣이다.

오답 포인트

보험·대출이라는 거래 종류만 보고 분류하면 틀리기 쉽다. (가)와 ㉡·㉢은 계약이나 지원 이후 행동이 달라진 사례이고, (나)와 ㉠·㉣은 거래 이전부터 존재한 위험성이나 품질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사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 비대칭이 작용한 시점을 확인한다. 계약 전에 상대방의 유형·품질을 몰라 잘못 선택하면 역선택이고, 계약 후 상대방이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을 바꾸면 도덕적 해이이다.

암기 포인트

계약 전 숨겨진 특성은 역선택, 계약 후 숨겨진 행동은 도덕적 해이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A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은 불황을 타개하고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A-뉴딜정책'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등 미래 먹거리 개발에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① 재정지출의 확대로 실업률은 감소하고 물가는 하락할 수 있다.

② 재정지출에 따른 조세수입의 증가로 흑자 재정이 확대될 것이다.

③ 재정지출을 채권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④ 재정지출을 조세만으로 충당할 경우 정부가 가계에 돈을 주는 만큼 돈을 거두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구축 효과, 균형재정승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여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불황기의 산출량과 고용은 증가하지만 물가에는 상승 압력이 생긴다. 정부지출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이자율 상승이 민간 투자를 줄이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규모로 늘려도 단순 케인스 모형에서는 균형재정승수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재정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물가에는 상승 압력을 준다. 틀린 표현은 '물가는 하락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물가는 상승할 수 있다'이다.
② X —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조세수입이 일부 늘더라도 지출 증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흑자 재정이 확대될 것이다'이며, 올바르게는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적자 재정이 확대될 수 있다'이다.
③ O — 재정지출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자금 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여 재정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④ X —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규모로 늘리더라도 정부지출의 직접적인 총수요 증가 효과가 조세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보다 크므로 국민소득과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소득과 고용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이며, 올바르게는 '균형재정승수에 따라 소득과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실업률 하락과 물가 하락을 함께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총수요 확대는 실업을 줄이는 대신 물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는 정부지출 증가액과 조세 증가액이 같으면 효과가 상쇄된다고 오해하게 하지만,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절댓값이 달라 효과가 0이 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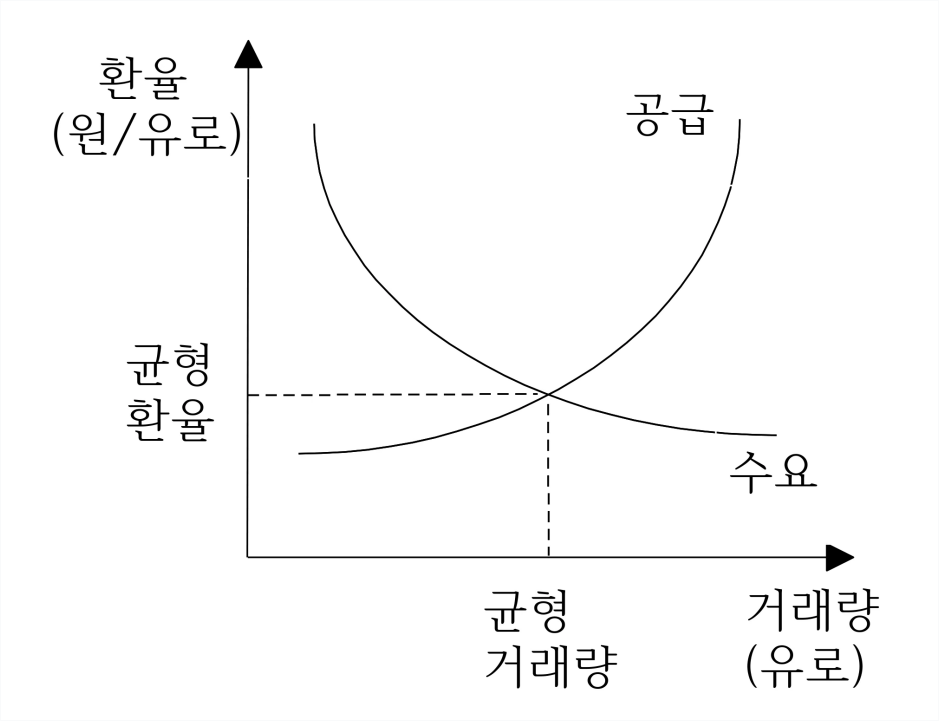
재정지출 확대 문항에서는 먼저 총수요 증가로 산출량·고용·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 확인한다. 이어 국채 조달이면 이자율 상승과 구축 효과를, 지출과 조세의 동액 증가이면 균형재정승수의 양의 효과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재정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늘리고, 국채 조달은 구축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지출과 조세의 동액 증가는 효과가 0이 아니라 양(+)이다.

NoteBase

문 12. 다음은 원/유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환율과 거래량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①~④ 각 선지에서 언급된 요인의 변화만 고려하며, 기업은 환율변화를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① 국내 기업의 프랑스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국내 기업의 독일 국채 매입이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이탈리아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원/유로 외환시장에서 유로의 수요·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구분하고, 곡선 이동에 따른 균형환율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원/유로 환율, 가로축은 유로 거래량임을 확인한다.
2. 유로를 사려는 거래는 유로 수요, 유로를 팔아 원화로 바꾸려는 거래는 유로 공급에 해당한다.
3.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환율과 거래량을 높이고, 공급 증가는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환율을 낮추고 거래량을 늘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국내 기업의 프랑스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유로를 원화로 바꾸려는 유로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환율은 하락한다. 틀린 표현인 '환율은 상승'은 '환율은 하락'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국내 기업이 독일 국채를 더 많이 사려면 원화를 유로로 바꾸어야 하므로 유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환율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③ X —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금융자산의 상대적 수익성이 높아져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은 늘고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유로 공급은 증가하고 유로 수요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원/유로 환율은 하락한다. 두 곡선이 함께 이동할 수 있어 거래량 변화는 이동 폭에 따라 달라진다. 틀린 표현인 '환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는 '환율은 하락하며 거래량은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원/유로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유로 표시 가격의 이탈리아 제품을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환율변화가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되므로 이탈리아 제품의 국내 가격경쟁력은 하락한다. 틀린 표현인 '가격경쟁력은 상승'은 '가격경쟁력은 하락'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수출 증가를 유로 수요 증가로 착각하기 쉽다. 국내 기업은 수출 대금으로 받은 유로를 외환시장에 공급한다. 또한 환율 상승은 유로 가치 상승이자 원화 가치 하락이므로 유럽 제품의 국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거래가 유로를 사는 거래인지 파는 거래인지 판별한다. 유로를 사면 수요곡선, 유로를 팔면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그다음 수요 증가이면 환율·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이면 환율 하락·거래량 증가라는 새 균형을 확인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미치는 변수만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수출은 외화 공급, 해외 자산 매입은 외화 수요이다. 원/외화 환율 상승은 외국 제품의 국내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개방경제인 A국의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A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소비는 2,000, 투자는 500, 정부지출은 400, 수출은 1,500, 수입은 1,000을 차지한다고 가정하자. 이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A국의 국제수지에서 오차 및 누락은 없으며,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금융계정은 0으로 가정한다.)

국내 총생산 = 소비 + 투자 + 정부 지출 + 수출 - 수입

① A국의 내수의 합계는 2,900이다.

② A국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흑자이다.

③ A국의 재정정책 효과는 폐쇄경제국가보다 작을 수 있다.

④ A국의 국내 소비와 국내 투자는 폐쇄경제국가보다 위험관리가 쉬울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개방경제의 국내총생산 지출 항등식과 국제수지 항등식을 이용하여 내수, 경상수지, 자본수지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비는 2,000, 투자는 500, 정부지출은 400, 수출은 1,500, 수입은 1,000이다.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은 모두 0이다. 내수는 소비·투자·정부지출의 합이고,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다.

사용할 공식

$Y = C + I + G + X - M$

내수=C+I+G

경상수지+자본수지=금융계정

첫째 식은 개방경제의 국내총생산을 지출 항목별로 합산하는 항등식이다. 둘째 식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비·투자·정부지출을 내수로 묶은 것이다. 마지막 식은 오차 및 누락이 없을 때 국제수지 항목들이 서로 대응한다는 관계이며, 이 문항에서는 금융계정이 0이므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 0이 되어야 한다.

계산 과정

1. 내수는 $2,000 + 500 + 400 = 2,900$이다.
2. 순수출은 $1,500 - 1,000 = 500$이다.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가 0이므로 경상수지는 500 흑자이다.
3. 금융계정과 오차 및 누락이 0이므로 자본수지는 경상수지와 반대인 500 적자이다.
4. 국내총생산은 $2,900 + 500 = 3,4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내수는 소비·투자·정부지출의 합이므로 2, 000 + 500 + 400 = 2, 900이다.
② X. 경상수지는 순수출 500만큼 흑자이지만, 금융계정과 오차 및 누락이 0이면 자본수지는 이를 상쇄하는 500 적자이다. 틀린 표현인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흑자이다'는 '경상수지는 흑자이고 자본수지는 적자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개방경제에서는 정부지출 증가로 늘어난 소득의 일부가 수입 지출로 빠져나가므로 재정지출 승수와 재정정책의 효과가 폐쇄경제보다 작을 수 있다.
④ O. 개방경제에서는 해외 차입·대출과 국제적 자산 분산이 가능하므로 소비 변동을 완화하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가 폐쇄경제보다 쉬울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사실만 보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모두 흑자로 판단하는 데 있다. 국제수지에서는 한 항목의 흑자가 다른 항목의 적자와 대응하므로, 금융계정과 오차 및 누락이 0인 이 문항에서는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적자가 함께 나타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내수와 순수출을 분리하여 계산한 뒤, 서비스수지·소득수지·금융계정·오차 및 누락의 조건을 국제수지 항등식에 대입한다. 개방경제의 정책 효과는 수입 누출 여부로, 위험관리는 해외 거래를 통한 소비 평탄화와 자산 분산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내수는 $C + I + G$, 순수출은 $X - M$이다. 금융계정과 오차 및 누락이 0이면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수지 적자와 대응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가), (나)는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한 서로 다른 연구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여수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5개 학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했다.
(나) 춘천 지역 수몰민의 현재 생활과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15명과 심층 면접을 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① (가)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한다.
② (가)는 경험적 자료를 계량화하여 인과법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③ (나)는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 상황 정의를 사용하여 해석적 방법을 취한다.
④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입각하여 가설을 통한 연구설계를 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설문 조사와 통계 처리를 사용하는 양적 연구와 심층 면접을 통해 행위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론적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꾸고 수치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칙이나 인과 관계를 찾는 방법이다. 조작적 정의, 계량화, 가설 검증, 방법론적 일원론이 핵심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행위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다. 직관적 통찰, 감정 이입, 상황 정의, 방법론적 이원론이 핵심이다.
따라서 설문지와 통계 처리를 사용한 (가)는 양적 연구이고, 심층 면접을 사용한 (나)는 질적 연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양적 연구는 행복도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 지표로 바꾸는 조작적 정의를 사용한다.
② O — (가)는 설문으로 얻은 경험적 자료를 수치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변수 사이의 인과 법칙을 발견하려는 양적 연구이다.
③ O — (나)의 질적 연구는 심층 면접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 감정 이입하고, 그들이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를 해석적으로 이해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방법론적 일원론에 입각하여 가설을 통한 연구설계를 한다'이다. 이는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고 가설 검증을 중시하는 양적 연구의 특징이다. (나)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입각하여 연구 대상자의 의미와 맥락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질적 연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는 말 자체는 두 연구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 그럴듯하다. 그러나 '방법론적 일원론'과 '가설을 통한 연구설계'는 (나)가 아니라 (가)의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문지·통계·조작적 정의·가설 검증이 보이면 양적 연구로, 심층 면접·감정 이입·상황 정의·의미와 맥락의 해석이 보이면 질적 연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양적 연구는 수치와 법칙, 질적 연구는 의미와 맥락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조직들 중의 한 유형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합 무역업을 하는 OO 기업은 가격과 품질, 마케팅에 있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국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국가별, 지역별, 분야별로 조직을 나눠 각 조직들이 하나의 독립된 기업처럼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하였다.

① 특정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② 각 부서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③ 고도의 자율성과 팀워크를 조합한 조직으로 구성원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진다.
④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이 특정한 형태 없이 유연하게 변화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단위가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분화·결합하는 아메바 조직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아메바 조직은 기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작은 조직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가 시장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조직이다. 조직 단위가 아메바처럼 수시로 분화·결합하므로 고정된 형태가 없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프로젝트 조직은 특정 과업 수행,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 간 연결과 정보 공유, 팀 조직은 자율성과 공동 책임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특정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은 아메바 조직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한다. 아메바 조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단위가 자율적으로 분화·결합하는 조직이다.
② X — '각 부서 간 교류가 활발하고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게 얻는 조직'은 아메바 조직보다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에 해당한다. 아메바 조직의 핵심은 조직 간 정보 교류가 아니라 작은 단위별 자율 경영과 독립채산제이다.
③ X — '고도의 자율성과 팀워크를 조합하고 구성원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지는 조직'은 팀 조직의 특징이다. 아메바 조직은 소규모 조직 단위가 각자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며 시장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재편되는 조직이다.
④ O — 아메바 조직은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단위가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게 분화·결합한다. 지문의 각 조직이 독립된 기업처럼 가격을 정하고 영업이익을 계산한다는 내용도 아메바 조직의 독립채산제와 부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특정 과업', ②의 '정보와 지식의 신속한 교류', ③의 '동등한 지위와 공동 책임'도 모두 탈관료제 조직의 장점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지문의 결정적 단서는 각 소규모 단위가 독립된 기업처럼 가격과 영업이익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규모 단위, 독립채산제, 자율적 수익 관리, 환경에 따른 분화·결합이 함께 제시되면 아메바 조직으로 판단한다. 특정 과업이면 프로젝트 조직, 연결과 정보 공유이면 네트워크 조직, 자율성과 공동 책임이면 팀 조직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아메바 조직은 '작게 나누고, 스스로 계산하고, 유연하게 바뀌는 조직'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각 문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국 문화의 입장에서 MZ세대의 문화는 하위문화가 아니라 전체문화로 분류된다.

② 대중문화는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이 누리는 하위문화로,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다.

③ 1980년대의 대학생 운동권 문화는 반문화가 아니라 세대 문화이다.

④ 국교가 이슬람인 국가에서 가톨릭은 반문화로 분류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전체문화·하위문화·반문화의 구분 기준과 하나의 문화가 관점이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음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체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이다. 하위문화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이며, 세대 문화도 이에 포함된다. 반문화는 하위문화 가운데 주류 문화의 핵심 가치나 규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동일한 문화도 어느 사회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체문화, 하위문화 또는 반문화로 달리 분류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한국 문화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MZ세대의 문화는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세대 문화이므로 하위문화이다. 틀린 표현은 '하위문화가 아니라 전체문화'이며, 올바르게는 '한국의 전체문화 안에 존재하는 하위문화'이다.
② X — 대중문화는 특권층의 고급문화와 대비되어 다수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이지,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이 누린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집단의 하위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중은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재해석하며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대중문화를 언제나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대중문화는 다수 대중이 대중 매체 등을 통해 향유하는 문화이며, 획일성과 일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성격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이다.
③ X — 1980년대 대학생 운동권 문화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세대·집단의 하위문화이면서 당시 지배적인 정치·사회 질서에 저항한 반문화로 볼 수 있다. 틀린 표현은 '반문화가 아니라'이며, 올바르게는 '세대 문화이자 반문화로 분류될 수 있다'이다.
④ O — 어떤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문화와 대립하는 소수 종교문화는 그 사회를 기준으로 반문화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국교가 이슬람인 국가에서 가톨릭 문화가 지배적 종교 규범과 대립한다면 반문화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하위문화와 반문화는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범주가 아니다. 반문화는 주류 문화에 대립하는 하위문화이며, 세대 문화도 저항적 성격을 띠면 반문화가 될 수 있다. 또한 '누가 향유하는가'만으로 대중문화를 하위문화라고 판단하면 ②에 속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와 집단을 확인한다. 사회 전반이 공유하면 전체문화, 특정 집단만 공유하면 하위문화, 그중 주류의 핵심 가치와 규범에 대립하면 반문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특정 집단이면 하위문화, 주류에 대립하면 반문화이며, 반문화도 하위문화의 한 유형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집단들에 관한 공통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혼모, 이주 노동자, 정신병 환자, 장기수, 혼혈인, 철거민, 노점상, 임대 아파트 거주자, 산업재해 피해자

① 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현저히 적은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한다.
②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속된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구성원들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④ 사회적으로 오래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적 소수자를 단순히 수가 적은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놓여 차별받는 집단으로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적 소수자는 특정한 신체적·문화적 특성이나 사회적 처지 때문에 다수 집단보다 사회적 영향력과 자원 배분에서 불리하고 차별받는 집단이다. 핵심 기준은 구성원의 숫자가 아니라 권력관계에서의 열세와 차별 경험이다. 또한 어떤 집단이 소수자로 규정되는지는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상대적으로 숫자가 현저히 적은 집단'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사회적 소수자는 구성원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열세에 놓이고 차별받는 집단이다. 수가 많더라도 권력과 자원에서 불리하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② O — 사회적 소수자는 고정된 자연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같은 사람도 어느 사회나 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소수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③ O —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 차별, 배제 또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공통적 특징이다.
④ O —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고 실질적 기회 평등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불리한 처지의 집단에 일정한 우대나 기회를 제공하여 기존의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방법이다.

오답 포인트

일상어의 '소수'를 숫자가 적다는 뜻으로만 해석하면 ①을 맞는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수적 열세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열세와 차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적 소수자 문항에서는 인원수를 먼저 보지 않고 권력·자원에서 불리한지, 집단 소속을 이유로 차별받는지, 그 지위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적 소수자는 ‘숫자의 소수’가 아니라 ‘권력의 열세와 차별’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중 갑에게 적합한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 다른 직업이 없어 폐지 수집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왔으나, 최근 폐지 가격 폭락으로 월세 15만 원을 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60대 초반의 나이라서 새로운 직종에 진출할 엄두가 나지 않고, 배우자와 사별한 지 15년이 되었고 돌봐줄 자식도 없는 실정이다.

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② 본인뿐 아니라 친족 및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다.

④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이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갑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급여 신청 주체, 재원 부담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를 집행한다는 사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한다는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핵심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는 수급권자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보장비용은 업무와 비용의 종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시·군·구 보장비용도 국가·시·도·시·군·구가 법정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따라서 재원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 목적이다.

② O
수급권자 본인은 물론 그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틀린 표현: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다.
올바른 표현: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④ O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집중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오답 포인트

③의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함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접수하고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이것이 모든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만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다. 급여의 실시 주체와 비용의 분담 주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부조 문제에서는 목적, 대상, 신청 주체, 재원 순서로 판단한다. '전액', '오직', '본인만'과 같은 단정적 표현이 나오면 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분담이나 제3자의 신청을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 본인·친족·관계인의 신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9. 다음 (가), (나)는 각각 ○○시 불법 주차와 청소년 폭력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가), (나)의 일탈 행동의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원래 이 지역에 불법 주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차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외부인들이 유입되고 전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세우는 차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게 되어 결국 경쟁적으로 불법주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 원래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항적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대대적 단속과 제재 강화, 학교 당국의 제적 처분의 증가로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을 사회에서 유리된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① (가):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해야 한다.
② (가): 전철역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주차시설을 늘려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③ (나): 공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④ (나): 비행 청소년들을 골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지역 내 청소년들과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탈이 주변으로 모방·확산되는 현상과 제재로 생긴 낙인이 2차 일탈을 강화하는 현상을 구별하고, 각각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한 사람의 규범 위반이 방치되면 통제가 약하다는 신호가 되어 다른 사람도 이를 따라 하는 무질서의 확산을 보여 준다. 초기 위반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통제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나)는 공식적 제재와 배제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을 부여하고, 당사자가 그 낙인을 내면화하면서 2차 일탈이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낙인과 배제를 줄이고 사회 복귀와 정상적 교류를 돕는 방안이 적합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법 주차가 모방을 통해 확산된 사례이다. 특별 단속과 과태료 인상은 위반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어 확산을 억제하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주차시설을 늘려서'이다. (가)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설 부족이 원인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초기 불법 주차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단속으로 모방과 확산을 막아야 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불평등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해결의 초점을 둔 것이다. 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에 가까우나, (나)의 핵심 원인은 강한 제재와 제적이 만든 낙인과 사회적 배제이다. 올바르게는 낙인적 처우를 줄이고 청소년의 재통합과 정상적 관계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지역 내 청소년들과 교류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격리와 배제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을 더욱 강화하여 2차 일탈을 촉진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배제보다 사회 복귀와 건전한 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전철역 주변이라는 말만 보고 주차시설 부족 문제로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제시문은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고 못 박고 있다. ③과 ④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 개선이나 격리는 제시문의 핵심인 낙인과 배제를 직접 완화하지 못하며 특히 격리는 이를 악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치된 위반을 다른 사람이 따라 한다'면 초기의 신속한 통제를, '제재·배제 때문에 스스로 일탈자로 인식한다'면 낙인 완화와 재통합을 해결 원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무질서의 확산에는 초기 통제, 낙인의 확산에는 배제 완화와 재통합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중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통의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한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② 내세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할 수 있다.

③ 도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일탈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④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부조리와 같은 사회문제들을 비판하고 사회 변혁을 추동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종교의 기능 가운데 사회 전체에 작용하는 사회적 기능과 개인의 내면에 작용하는 개인적 기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공통 가치와 규범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거나, 기존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여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기능이다. 반면 개인적 기능은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내세에 대한 희망을 주어 불안과 고통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종교는 구성원에게 공통의 가치관을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과 결속을 높이므로 사회 통합 기능에 해당한다.
② X — '내세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 작용하는 개인적 기능이다. 올바르게는 종교의 개인적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③ O — 종교가 도덕적 기준과 행위 규범을 제시하여 일탈을 억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 통제 기능에 해당한다.
④ O — 종교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하고 새로운 가치와 개혁 운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촉진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도 종교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이므로 그 자체가 틀린 설명은 아니다. 다만 '심리적 안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개인이므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묻는 이 문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능의 직접적인 대상이 사회 전체인지 개인의 내면인지 구분한다. 사회 통합·사회 통제·사회 변혁은 사회적 기능이고, 삶의 의미·위안·심리적 안정은 개인적 기능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통합·통제·변혁은 사회, 의미·위안·안정은 개인이다.

NoteBase